

“서남권에 세계도자기엑스포 유치하자”

도자산업 활성화 국제 이벤트 필요 영암서 열린 전남 민선8기 첫 회의 강진군 요구로 공동개최 방안 논의

영암·강진·무안·목포 등을 중심으로 전남지역 도자 문화의 계승·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벤트 행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영암 호텔현대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회의에서 강진군 요구로 상정한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강진군은 강진을 비롯, 영암, 무안, 목포 등의 오랜 도자 역사와 전통으로 전남 서남권 도자산업 벨트가 형성됐고 전남 도자 관련 업체의 65%가 집중적으로 위치한 점 등에도 미흡한 마케팅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 도자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방안을 협의에 상정,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강진의 경우 사적 제68호로 지정된 대구면 용운리 '강진 고려청자 요지' 183기와 전남도 지방기념물 제81호로 지정된 '강진 삼층리 도요지' 5기를 합해 총 188기의 요지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영암의 도기는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화도(高火度·높은 온도로 굽는) 시유도기(유약을 바른 도기)로, 영암 구림 도요지는 국가사적 제338호로 지정된 바 있다.

무안 분청사기(粉靑沙器)도 지역의 대표적 향토 자원이다. 분청사기는 조선시대에 만든 자기의 하나로 청자의 백토(白土)에 분을 발라 다시 구워낸 것으로, 회청색이나 회황색을 띠는데 무안 분청사기는 '도산' '물산조' 등 도자사(陶器史) 기록에도 남아 있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깊다. 무안 동탄면 일대의 경우 양질의 고령토가 풍부하고 영산강 수로가 가까워 삼국시대부터 웅기와 질그릇을 만들어왔던 대표적 도요지로 알려져 있다.

강진군은 이같은 전남 서남권 도자산업의 역사와 전통의 가치에도, 미흡한 마케팅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들어 전남의 우수한 향토 문화자원을 알릴 국제적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별로 단순히 옛 도자문화의 보존에 그치는 형태의 운영에서 벗어나 세계도자기엑스포 등 국제적 이벤트를 열어 대중이 지속적으로 도자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지역 향토 문화 자원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진·영암·무안 등 전남 도자 벨트의 핵심인 지역들이 주변 도자 문화시설 등과 연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산업·경제·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자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점을 감안, 협의회를 통해 전남도가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전남권역은 강진 청자를 비롯해 목포·무안·영암지역의 생활자기 집적화가 이뤄진데다, 경기도 지역보다 도자 산업의 역사와 전통을 보유하고도 적절한 마케팅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생활자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제 박람회 등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공존하려면

전남도 공존형 모델 개발 나서 덴마크 등 해외 선진 사례 조사

지역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 과정에서의 최우선적인 고려 대상이다.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설 입지가 연안 어장과 상당부분 겹치는 상황에서 "한 순간에 일터를 빼앗길 판"이라는 어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려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최근 실시한 해외 선진지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전남 해역 특성에 맞는 '공존형 해상풍력' 모델을 마련한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관련 시·군, 목포대, 군산대 등과 공동으로 영국과 덴마크 해외 선진 해상풍력단지 현황을 둘러보고 벨기에·노르웨이 해상풍력 전문 연구기관 등을 찾아 공존모델 개발 연구 등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남도가 앞서, 국가연구개발(R&D) 공모를 통해 192억원 규모의 '해역환경과 특성에 적합한 공존모델 실증 연구개발(R&D) 사업'을 유치한데 따른 것으로, 이번 사례조사 결과도 반

영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서해안형과 남해안형으로 나눠 공존형 발전 모델을 개발할 계획으로, 서해안형의 경우 공존형 어선업 모델과 양식업 모델로 개발한다. 남해안형은 양식·관광업 병행모델, 자원조성·관광업 병행모델을 적용하는 등 각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존모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또 해상풍력발전단지별 가능한 어구·어법 및 풍력단지내 양식장 간격(거리) 등 안전기준도 마련하는 등 해상 풍력 사업과 지역 수산업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공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남도는 사례조사 결과를 어업인, 해상풍력발전 관련 업체 등과 공유하는 한편,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전남형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표준모델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공존하는 표준모델을 개발해 수산업, 에너지, 관광업을 연계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드론 인재들, 나주 혁신도시에서 '꿈' 활짝

정보진흥원 청년 일자리사업 'DNA+US 프로젝트' 참여 10명 나주 '에스엠소프트' 입사

지역주도형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일자리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에 진출한 청년 근로자들이 4차 산업의 핵심인 드론 산업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전남 4차 산업의 장래를 밝게 하고 있다.

나주시가 주관하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DNA+US기반기업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 구직자들이 대거 혁신도시 나주에 소재한 드론 강소기업에 입사하면서 전남 드론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10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입사한 ㈜에스엠소프트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AI와 드론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드론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으로, 안전성 인증은 물론 자체 관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국내 무인기 시장을 선점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36명의 근로자 가운데 10명이 DNA+US프로젝트 교육 및 일자리지원으로 청년 근로자들이 배치되면서 도전과 패기가 넘치는 사내 분위기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입사한 김상곤(30)씨는 현재 하드웨어 팀에서 농업용 드론 개발과 교육,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드론 계통에서 근무한 지 5년 차인 그는 드론의 체계적인 기술을 배우기



나주 소재 산업용 드론 제조 기업인 ㈜에스엠소프트에 입사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 왼쪽부터 김상곤(30), 정유진(25), 임혜성(28)씨.

위해 과감히 이직을 선택했다.

두 달 전 입사한 임혜성(28)씨는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임씨는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드론이 작동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발과 서버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입사한 정유진(25·여)씨는 임씨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팀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앱 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 청년 근로자들은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

관 'DNA+US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최악의 구직난에 처한 청년의 보금자리 마련과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달라는 간곡한 요청도 남겼다. 'DNA+US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전남도·나주시·목포시·순천시·광양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진흥원이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팔 걷었다

행정부지사 단장 추진단 꾸려 모든 공무원 복지 상담요원 활용 복지기동대 운영 등 다양한 대책

전남도가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해소하는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모든 공무원을 복지 상담요원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지역공동체에 계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할을 부여하는가 하면, 복지위기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지역민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직접 복지서비스 신청 현장을 찾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5일 김영록 전남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긴급히 추진단을 꾸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당장, 도는 지난 29일부터 읍·면 희망복지팀,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위험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특히 2개월마다 단수·단전·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 입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 대상자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굴된 위기정보 입수자는 담당마을 공무원과 이·통장을 전남 관리자로 지정해 주 1회 이상 상담

하고 안부를 살펴 건강 상태를 파악키로 했다.

모든 공무원을 복지상담요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복지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기초 복지교육을 시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도 "도내 복지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으나 절차와 내용이 복잡해 담당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이 긴급지원 등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게끔 역량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도민이 119처럼 복지상담 콜센터(129)도 잘 인지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심야 등 취약시간에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체계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복지 담당 인력이 부족한 데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을 운영해 위기가구를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전남도는 지난 26일 행정부지사 주제로 시·군 부단체장회의를 열어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이웃을 찾아 긴급지원하고 민간 자원과도 연계해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남도는 또 통합사례관리사 상담, 복지상담 콜센터(129) 상시 현수막 게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전단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관리·강화, 위기정보 입수자에 대해 맞춤형서비스 제공, 주1회 이상 상담 및 안부살피기 등 촘촘한 복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